



부동산 정책 · SOC 예산 축소... 치열한 공방 예상

- 2007년국회국정감사, 한반도대운하 '공약도뜨거운감자'-

또다시국정감사의계절이돌아왔다. '국회기능의꽃' 국감을앞두고여의도정가가분주하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신선한 바람이불어오는것과달리, 국회를둘러싼공기는 점차뜨거워지고있다. 행정부견제라는국회 고유의활동이라는점에서, 그리고의원개인의이름을알릴수있는절호의기회라는 점에서많은의원실의불꺼지는시간도조금씩늘어지고있다.

특히 올해 국정감사는 연말 대선 정국을 앞두고 열리는 것이어서 특정 현안이나 이슈를놓고정당간공방도한층치열할 전망이다. 노무현정부에서마지막이될국회건설교통위원회국정감사에서다뤄질주요이슈들을살펴봤다.

참여정부 부동산 정책, 치열한 논쟁 예상

올해 건설교통 분야에 대한 국정감사에는 참여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과 국토 균형발전정책이도마에올것으로예상된다. 특히참여정부의부동산정책을둘러싼논쟁이뜨겁게달아올것으로보인다.

정부는 2003년 '8·31 대책' 이후에도 각종 후속 대책을 발표했지만 참여정부 부동산대책의 종합판은 역시 8·31 대책이라는게부동산업계의중론이다. '8·31 대책'은주택과토지에대한세금강화를통한부동산투기억제에초점이맞춰져있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보유세 부담을 늘리고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로 다주택자의 양도차익을환수하는데역점을뒀기때문이다. 또 집 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된 재건축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개발부담금 및 기반시설부담금부과조치도함께이뤄졌다.

'8·31 대책'으로대표되는노무현정권의 부동산 정책은 외형상으로는 '집값안정'이라는 목적을 달성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거래시장 자체를 침체시킨 원인이라는 평가도받고있다. 부동산투기를막아야한다는데대해건교위소속의원들이모두공감대를형성하고있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고 주거 안정을 이루기 위한 실질적인 정책이 있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게 사실이다. 특히 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일괄적인 시행에 따라 지방 부동산시장의 침체 악화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따라 지방 부동산시장이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주택 담보대출규제와주택전매제한강화등이과연바람직한정책인가를놓고건설교통위소속의원들 간논공방이뜨거워질 전망이다. 한나라당 한 의원은 "부동산대책이 집 값안정보다인위적으로거래를중단시켜결국에는 시장 왜곡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며, "거래위축에대한정부의책임추궁과함께대책마련도추구할계획"이라고말했다.

지방 경기 침체에 목소리 거세질 듯

건설경기위축에따른지방중소건설업체들의 잇따른 부도 사태도 이번 국감장에서주요현안으로다뤄질전망이다. 최근들어 부동산시장이 장기 침체되면서 도급 순위 10위권 이하 업체들의 흑자 부도 사례

가늘고있다. 지난5월현재전국의미분양 주택은 8만여 가구에 달하고 이 가운데 96%가 지방에 몰려있다. 지난해 지방의 일반건설업체 6개사가 부도를 낸 데 이어 올해 들어 7월까지도 부도 업체가 36개사에 이르는 등 건설 경기의 부진은 지역경제 침체의 결정적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주택 미분양 해결을 위한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주택 담보 대출 규제 완화 등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에 도합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SOC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 위에

여느 국감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국감에서도 주택구구식국책사업추진에 따른 국고 낭비 및 건설 행정의 효율성 문제와 관련된 의원들의 자료 요구와 질의가 많을 것 같다. 민주당 관계자는 “건교부가 주택구구식국책사업 추진과 사업 계획의 잦은 변경, 잘못된 수요 예측으로 수조원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많다”며, “자료 분석을 통해 국고 낭비의 심각성과 책임 소재 등을 따져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공공성 및 윤리성 부재도 주요 메뉴로 등장할 전망이다. 지난해에는 국감에서 토지공사 직원과 가족 129명이, 200억 이후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되자 미분양된 회사 보유 택지 180억 원 어치를 선착순 수익 계약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기도 했다.

SOC 예산 축소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공공SOC 건설 현장 가운데 절반가량이 예산 배정이 안 돼 심각한 공사 차질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대한건설협회가 최근 전국 공공SOC 건설 현장 400여 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47.4%가 예산 부족으로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건설 현장 가운데 45.4%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전(외상) 공사를 하고 있고, 48.5%

는 공종이나 인원을 축소하는 등 파행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정이 이런 데도 최근 정부가 집계한 내년도 수송 및 교통 분야 예산은 올해 18조 4,000억 원보다 6,000억 원이 줄어든 17조 8,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사회복지·국방·교육 분야는 10~12% 이상 늘었다.

이렇듯 SOC 예산 축소는 공기 연장→업체 경영 부담→품질 저하 및 안전 문제 야기→공사비 상승→정부 예산 낭비 초래 등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및 대도시권의 교통 혼잡 해소와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와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SOC 투자가 지속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주공의 중대형 임대아파트도 논란일 듯

박세흠 대한주택공사 사장은 8월 28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100 132㎡(30 40평형) 수준 이상의 중대형 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대주택이 ‘저비용·저수익’이란 부정적인 인식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와 주택 수준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박 사장은 이어 “23㎡(7평형) 짜리 임대주택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330㎡(10평형) 짜리 임대주택도 있어야 한다”며 강조했다. 주공의 중대형 임대주택 건립 방침에 대한 정치권의 시각은 골지만은 않다.

민노당은 지난 달 말 성명을 내고 “임대아파트에 대한 인식 전환을 빌미로 주공이 집 장사에 나서겠다는 의도로까지 비친다”고 비판했다. 공공기관으로서 집 없는 서민들의 쉼을 한심사를 달래줘야 할 주공이 앞서서 ‘집 장사’를 하겠다는 속내를 거침없이 드러냈다는 비판이다. 이번 국감장에서 도이 문제가 민노당 등 일부 야당의원들의 공격 대상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민노당의 한 의원 보좌관은 “주택공사는 민

간 건설업체와 집장사 경쟁을 하는 곳이라 나라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초점을 맞춰 정부 정책을 일선에서 추진하는 곳”이라며 “대형주택을 짓겠다는 주공의 의도는 결국 일부 부유층에 양질의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얘기 아니냐”고 반문했다.

‘한반도대운하’ 효율성 높고 대격돌 예상

차기 유력한 대통령 후보로 꼽히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한나라당 대선 후보)의 최대 대선 공약인 ‘한반도대운하 건설’의 효율성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다른 정당 의원간 공방도 열기를 내뿜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내부에서조차 한반도대운하 공약 철회를 주장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대운하 건설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운하가 개통될 경우 물류 혁명과 함께 지역 균형 발전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신당과 민주당 등은 “수익성도 떨어지고 건설 실효성도 낮다”고 맞받아치고 있다. 향후 국감장에서 뜨거운 감자로 등장할 것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서울도곡동 땅 문제, 이명박 후보의 차명 재산 의혹도 국감장의 뜨거운 재료로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범여권의 의원들이 이 후보를 직접 증인으로 신청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경우에 따라서는 파행으로 점철될 공산도 적지 않다. 민주신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최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명박 후보에 대해 한나라당 안에서 제기한 풀리지 않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실체를 밝혀야 할 것”이라며, “다만 국감이 이 후보에 대한 검증에 치중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남북 정상 회담과 관련, 남북 경협과 북한 SOC 시설 지원 등에 대한



이면 합의 여부에 대한 야당의원들의 집중 추궁도 예상된다. 

조철현
중앙일보 기자